

# 불기소 논란 전남대 성추행 사건 ‘재점화’

검찰 “신체 접촉·불편감 느껴도 성적 수치심 일으킨 추행 아냐”

피해자 광주고검에 항고장 제출…“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판단”

“수치심은 다양한 감정으로, 몸 어떤 부위든 추행 본질은 같아”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 권역,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등이 26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비위 사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을 광주고검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피해자 측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 재수사를 요청하면서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피해자(고소인)의 법률 대리인들은 26일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광주지검은 2019년 말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과장 A씨를 ‘증거 불충분’ 등을 이

유로 지난 6일 불기소했다.

검찰은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으나 A씨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 대리인은 항고 이유서를 통해 ‘검찰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 대리인은 “불기소 처분은 ‘어깨·팔 정도를 만진 것’을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는 의구심과 ‘추행 행

위 전 피해자가 피의자와 악수를 하고 잠시 춤을 추기도 해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과 일맥상 통한다. 검사는 피의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불쾌감·분노·공포·무기력감·역겨움·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으로 치환될 수 있다. 검찰이 말한 불편한 감정 자체

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신체 특정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검사는 판결 취지에 반해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는 여성 몸의 어떤 부위는 만져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토대로 처분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위치에 의한 추행 사건의 특수성도 감안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의 편견·집착·왜곡된 기준은 가해자에게 무죄 주장 논거를 줬다. 실제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에서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시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변호사·여성·인권·시민단체들도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올바른 성 관념을 토대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보도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사건 감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굴욕·혐오감을 느끼도록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대는 피해자를 ‘인권센터에 허위 신고했다’며 되려 해고했다.

김민정기자

손님 행세로 귀금속 가로챈 20대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 절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인 10대 B군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7시에 광주 북구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 업주를 속여 금반지를 착용하고 달아나는 등 이탈에만 광주 도심 내 금은방 2곳에서 총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에 생활비를 벌고 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B군을 시켜 범행 전후로 금은방 주변을 살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러 제동장치 밟고 손 뺀어 추행…택시기사 실행

고의로 제동장치를 밟거나 카드를 건네주면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30대 택시 운전기사가 실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21일 오전 4시 20분께 광주 도심을 주회하던 택사에서 조수석에 있던 10대 B양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4시 10분께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에 정차한 택사에서 20대 여성 손님 C씨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여름 무렵 B양을 여러 차례 무료로 승차시켜준 뒤 ‘택시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비를 결제한 뒤 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 C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사·증거 내용을 종합하면 B양은 ‘당시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이 없었고,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B양이 A씨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려 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버스가 실행

법원이 과속·신호 위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버스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 앞 네거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여)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42km로 진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초과·정지신호 위반을 비롯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운전할 의무를 어겨 피해자를 다치게 한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퇴원 이후에도 다친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 완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차량 탑승 때나 주위에 차가 지날 때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뒀고, 할머니조차 피해를 돌봐야 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 전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불법이용 3건 적발

법 위반 미이용 2건·타 목적 이용 1건

전남도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1126만㎡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5만9200㎡를 대상으로 최근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거래면적의 94%인 40

건·5만6200㎡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 문제가 없었으나, 법을 위반한 미이용이 2건·각 1800㎡, 타 목적 이용은 1건·1200㎡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이들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미이용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주거용은 3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등 이용 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임춘보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며 “불법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